

화요세평



권훈

미래아동치과의원 원장·남구치과의사회장

2022년 8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둔 필자의 스승이신 교수님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원들과 함께 추억에 오래도록 남을 만한 곳에서 회식을 했다. 장소는 광주가 아닌 화순 도곡면에 있는 양참사택 안마당이였다. 고풍스러운 양반 주택인 기와집 안채와 사랑채의 중간에 있는 마당에서 먹는 음식 맛은 일품이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구름, 별과 달은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미디어 아트 쇼를 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폐가 고택에 생명력 불어넣어

화순 양참사택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건축된 지 300년이 지난 고택이다. 만찬 장소는 우리를 타임머신에 태워 300년 전으로 보낸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일상에서 화순 양참사택처럼 오래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지만, 고택에서 식사를 한다던가 등 고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다. 필자는 최소한 그날 저녁만큼은 마치 고택의 집주인이 된 듯한 작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화순 양참사택을 다녀와서

화순 양참사택에 관한 스토리는 더욱 감동적이다. 양참사택은 거주자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돼 오다가, 2013년 27세의 문화 기획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 문화재를 구입해 폐가 상태인 고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영끌과 빚투가 유행하는 최근의 흐름과 전혀 상반된 고택 새 주인의 헌신적인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 화순 양참사택의 주인 덕분에 지난 300여 년간의 흥망성쇠를 거친 고택은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필자의 치과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양림역 사문화마을이 있다. 양림동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로서 한국의 근대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필자는 점심 시간에 산책을 겸해서 양림동 역사 마을을 둘러보고 한다. 광주 남구 양림동과 사동에도 화순 양참사택보다는 건축 년도가 한참 못미치지만 그래도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가옥이 3채가 있다.

이장우 가옥은 1899년 정병호가 건축한 전통 상류 가옥으로, 1959년 이장우(1919~2002) 박사가 매입해 증축을 해 완전한 조선시대 가옥의 모습을 갖추게 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옥은 원래는 내부 관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옥 개방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광주시 민속자료 제1호에 지정된 이장우 가옥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상허 이태준 가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하루 빨리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최승호 가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최상현의 집이었고, 이곳은 독립운동가인 은신처로 사용된 곳이라고 한다. 1968년 최승호가 이 가옥을 구입한 이후 그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최승호 가옥은 관람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필자는 양림역사마을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는데도 고택의 기품과 풍광에 절로 탄성이 나오게 할 정도다. 최승호 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무등산이 훤히 보이는 산책길 코스가 있다고 한다. 광주시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 있는 최승호 가옥의 대문이 일반에게 활짝 열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복합 문화공간 재탄생 기대

현재 최승호 가옥의 원주인이었던 광주의 최고 부자로 명성을 날렸던 최상현 선생이 1942년 광주시 남구 사동에 지은 목조 2층 기와집은 우리나라 건축학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고택이다. 이 건물은 전통 한옥에 일본과 서양식 건축양식이 절묘한 독특한 근대 건축물이다. 현재 이 고택은 보호도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재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는 고택이 사람들의 관심을 아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옥과 같은 고택은 몇 년만 방치되어도 훗날 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 집은 건축의 결과물이고 사람과 함께 지내야만 생명력이 있고 건축의 완성품이 된다. 광주 양림동과 사동에 있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고택도 화순 양참사택처럼 사람들에게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세무광장

<7> 간이과세 배제업종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휴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

광업과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휴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제외), 전문·과

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자 등 적용 안돼

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개인 및 가정용 임대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제외)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택시, 용달 및 개별화물차, 그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제외)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자 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제정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도 배제 업종에 속한다.

국제정장이 정한 종목 기준은 ▲골프연습장, 주유소, 음식점, 백화점, 불링장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1회 거래금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

장 조달업 등 신종 호황업종이다. 또 지역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외환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기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은 예외다.

또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휴장소(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와 기타 지역 중 국제정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과세유휴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제정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독자광장

안도현 시인의 '할머니의 유모차' 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다.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아기도 젖병도 없이 손가방 하나 달랑 태우고 가고 있다. 이 유모차를 타던 아기는 올봄에 벌써 1학년이 됐다. 아기 손목이 굽어지는 동안 할머니 손등은 더 조글조글해지고 아기 종아리가 통통해지는 동안 할머니의 키는 더 작아졌다. 오늘은 유모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다.' 는 내용이다.

도심 한 구석이든 사골이든 아기도 없는 낡은 유모차에 폐지나 짐을 싣고 다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니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 일부 군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상회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관련 교통 사망사고, 금융사기, 성범죄, 실종·학대 발생률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0.5%, 2018년 56.6%, 2020년 5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예방 치안'의 중요성

실종 치매노인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길 잃은 치매 환자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연 7,650건 접수됐지만 2019년 1만2,479건까지 늘었다. 이 중 97%가 60세 이상 노인이다. 현재 실종 치매노인을 찾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경찰과 가족이 일일이 찾아 나선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 탐문도 중요하지만 전남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CCTV가 결정적인 목격자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지자체, 협력단체와 협의해 각 마을 입구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법 CCTV를 증설해왔다. 이제는 기존 CCTV의 화질을

개선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CCTV 양적 증가가 아닌 설치된 CCTV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통사고 잦은 곳을 찾아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몇몇 뜻있는 지자체에서는 중고 유모차를 수리해 무상으로 할머니들에게 드린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유모차 앞부분에 '벽돌 2장'을 달아달라고 요구하신다고 한다. 유모차가 너무 가벼우면 지탱이 되지 않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고령화 시대 치안 인프라는 바로 미래의 수요자인 나 자신을 위한 '벽돌 2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승명 고흥경찰서장 총경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원효사지구 부당한 영업보상 규명하라

무등산 자연 환경 복원을 위해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가게 운영을 하는 등 양심 불량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곳 일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건물주들이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이 이뤄졌고 투기성 거래 의혹까지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6년 원효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는 16개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나 보상 기준이 마련된 2017년에는 사업자 등록 수가 45개로 거의 3배 늘어났다. 이는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던 건물주들이 갑자기 마치 영업을 한 것처럼 건물 내부를 꾸며놓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같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아무튼 허위 보상과 투기 거래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원효사지구 이전 사업은 2013년 국립공

원 지정 이후 무등산 경관·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이용 인구 감소와 슬럼화를 겪으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상가를 소유,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고 과거 봉지와 컵라면 몇 개 진열하고 영업장인 것으로 눈가림해 보상을 받는 형태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상가 이전 작업, 부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 뒤따르는 의혹들로 관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달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차체에 공단 관계자에 대한 감사는 물론, 진정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사업자 등록과 납세 실적을 조사해 허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지 낱알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해상경계 침범' 바로잡아야

해상풍력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남과 전북 사이에 바다경계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중인 전북이 영광 해역을 무단 침범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어업권 침해 등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 부안·고창군 앞바다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첫 발을 댄 이 사업은 2.46GW 규모로 사업비만 14조원에 이르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계획 수립 이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2019년 부안 위도 해역에 실증단지가 완공되면서 본격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어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1,200MW 규모의 시범단지에 이어 같은 규모의 확산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이 산업부에 제출한 집적화단

지 사업계획서에 영광해역을 무단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해상경계를 가르는 '등거리 중간선'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여부로, 전남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사업 면적(448km)의 30~40%인 134~179km가 줄어들게 된다. 해상경계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부와 전남, 전북은 최근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용역을 둔 양 지자체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 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타 지자체의 바다 경계를 침범한 전북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전남도가 제안한 공동용역을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권한쟁의 심판을 가더라도 전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겁박과 다름 아니다. 해상경계는 어민들의 생존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남도는 원칙적 대응으로 전북도의 남침할 사업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젊어진 광주시의회를 향한 기대감

기지사첩



김용현

정치부 차장

젊어진 광주시의회가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열의를 가진 초선 의원들의 행보가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23명 재직 의원 평균 연령이 48.8세에 불과하고 여성 의원 비율은 43.4%에 달한다. 전반기 원 구성도 이귀순 제2부위원장, 강수훈 운영위원장,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 김나운 산업건설위원장,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정다는 윤리특별위원장 등 여성과 청년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개원 당시 폐기되고 역동적인 의회 운영이 기대됐지만, 한편으로는 경협 미숙과 경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개원 후 석 달 남짓 흐른 지금 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특유의 신선함과 패기를 살린 열정적인 젊은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주년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빠르게 증명하고 있다.

대표 청년 주자인 강수훈 의원은 취임 초기 해묵은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기 사익 중심의 패거리 집단과 거리두기, 연설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기, 민심을 읽기 위해 다양한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장유유서에 다른 수직적 패러다임 전환하기, 존재 과시만을 목적으로 언론을 호도하거나 갈라치기 않기 등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초선인 정다는·채은지·이명노 의원 등도 지역활동과 더불어 매일 의회에 출근해 시정을 살피고 있으며, 주말에도 늦게까지 현안에 대해 공부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후 위기, 도시계획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미래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모임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직원은 "젊은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선 의원들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거수기 논란이 이어졌던 과거 의회와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례와 의정활동, 집행부 감시 등 시민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게 결국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다. 초선·다선 의원들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일꾼이 돼 주길 바란다.